

언론인 재교육의 당면과제

-외국의 언론인 재교육제도와 비교하여-

이정춘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문성을 요구받는 언론인들에게는 부서별로 객관적(sachlich) 과제에 부응된 연수과정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인의 재교육에 대한 학계와 언론계사이에 산학협동적 차원에서의 협의기구가 운영되어야 하겠고 신문사의 발행인들과 방송국회장들의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힘으로써 공동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1. 서론

한 사회의 언론현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실」에 존재하고, 앞서가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인식 및 의견교류의 사실태(Sachverhalt)이다. 여기서 「현실」이라는 언론현상의 시간의존성은 인간의 존재와 그 존재양식에서 본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은 공존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과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결정을 강요받는다. 따라서 인간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예측을 필요로 하며 이에 언론은 대중의 지식(Wissen)과 의지(Wollen)와 그리고 행동(Handeln)을 규정지어주는 막중한 역할과 사명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중의 현실대처적 성숙(Mundigkeit)을 위한 언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이나 오류란 한마디로 전체대중에 대한 잠재적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의 현실보도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은 흔히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외적 제약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는 일반의 인식은 금물이다. 여기에는 언론인 스스로의 직업적인 의식과 전문화를 위한 교육의 결여를 원인으로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급변하는 정치적 와중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의 언론은 지나친 과잉보호 속에서

물가치성과 개성상실의 획일화 경향을 노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인의 일상업무란 지속적인 시의성에 쫓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도구적 기능화의 타성에 젖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전문성과 의식의 마비를 가져오기 쉽다. 또한 「야누스」적 언론의 공공성과 기업성은 외적 압력에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오히려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한 방제로서 전략하고 있다. 이는 언론인들로 하여금 직업적 사명감에 회의를 갖게 하고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을 추구하게 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주는 경영상에는 즉시적 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인적교육의 투자에 인색하고, 일선 실무자들 스스로도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직업활동을 정치적·사회적 도약의 방편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언론연구원이 실시한 현직 언론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언론계에 평생을 종사하겠다는 언론인은 20%에도 미치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의 직업선택에 후회하고 있다는 언론인들도 4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나라의 언론발전에 저해적인 언론인들의 의식풍토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며 언론인의 전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화 교육이란 기능의 전문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전문인(professional)이란 특수한 지식과 함께 전문인적 의식이 결합되었을 때에는 기능인으로 밖에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인의 교육은 말 그대로 「전문화」와 「의식고취」가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언론인의 전문적 직업능력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즉 어떠한 것이 언론인의 교육적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설적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언론인 재교육제도는 어떻게 실시되어 왔고, 또한 실시되고 있으며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가를 외국의 언론인 재교육제도와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언론인의 전문적 과제와 객관적 과제

직업적으로 전문인(professional)은 특별한 능력(competence)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인의 직업적 능력은 분류기준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공통점을 갖고있다 하겠다.

- 전문인은 당면하는 문제성에 대해 특수하고 체계적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한다.
- 전문인에게 맡겨지는 문제에 사회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특정한 문제의 해결능력은 관계 전문인들이 독점한다.
- 전문인과 이들의 직업조직은 높은 자율성을 갖는다.

- 전문인의 직업활동에 대한 비판은 비전문인이나 일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전문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파생되는 문제의 다양성은 전문화된 지식을 더욱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전문직업의 분화와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재고시켜주고 있다. 18~19 세기에 걸친 산업혁명과 함께 대중매체의 발달은 제 2의 중요한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전문화된 송신자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각시켜 주었다. 그러나 초기의 언론인은 독립된 관찰자요 비판자였다면 매스 · 미디어의 상업화와 이윤추구적 기업화에 의해서 언론인은 엘리트들과 대중 그리고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수동적인 「브로커」가 되게 하였다. 또한 언론은 기업성으로 인하여 이질적이고 비당파적인 대중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의사표명이나 언론인적 비판적 역할이 둔화되었다. 따라서 언론인의 전문성은 「기술적 -언어적 중계」의 기능적 능력에 치우치게 되었고, 전통적인 계몽(Aufklärung)과 비판능력의 상실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술적-언어적 중계에 제한된 언론의 기능성은 전문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론인은 어떠한 기능성과 함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가? 또한 일정한 능력의 한계규정은 가능한 것인가?

언론인의 능력에 대하여 일치된 규정은 역시 불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언론인의 직업적인 과제(Aufgabe)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언론인의 직업적인 과제를 「전문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전문적 (fachlich)인 과제는 커뮤니케이션 방식(Modus)과 관련되는 언론활동을 말하고, 반면에 객관적(sachlich)인 과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만 하는 대상유관적 언론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1) 전문적 과제

일반적으로 언론인의 전문적 과제들은 다음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적 과제」, 둘째 매스컴 정책과 유관된 「규범적 과제」 그리고 세번째로는 매스 · 미디어의 정보선택과 제공에 있어서의 「책임논리적 그리고 합목적적인 과제」이다.

첫번째의 기술적 과제는 사회적인 집단들 간에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언론인의 원초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기능적 과제로서는 구체적으로 정보의 「수집」, 「선별」, 그리고

「제시」를 들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 교육에 의해서 전수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능력 또는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 조사방법
- 정보원과의 친분과 교류
- 정보의 식별
- 인터뷰 기술
- 언론 업무의 법률적 허용과 한계의 지식
-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한 적응력
- 정보의 언론적 그리고 영상적 구성
- 수용자들과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조건들에 대한 지식 등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은 물론 완전한 것은 될 수 없으나 언론인의 「기술적 과제」와 이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은 주로 기능적 능력에 한정된 과제인 것이다. 두번째로 제시되는 언론인의 전문적인 과제는 언론정책과 유관된 규범적 과제이다. 즉 언론인의 규범적 과제는 반특권화된 주변(Periphery) 집단에게도 만민권(Jedermanns-Recht)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현실화해서 불균형적인 언론현상을 균형화하는 전문인적 의식이다. 이같은 기본권은 특정의 정치적 이익이나 대자본의 이익은 물론 언론의 커뮤니케이션적 특권을 옹호해 주기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인은 이러한 원초적 사실을 망각하고, 언론자체의 이익은 물론 정치적인 특정이익과 대자본의 시녀적 속성을 드러내는 예가 허다하다. 따라서 언론인 스스로부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평등한 참여자로서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언론인의 규범적 과제는 의적교육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하겠다. 세번째로 언론인의 전문적 과제는 「책임윤리적」, 그리고 「합목적적」 행동(M. Weber)과 일치하는 과제로서 이는 「분산된 공중」(C. Maletzke)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매스·미디어에 있어서의 정보선택과 제공을 말하는 것이다. 언론인은 어떠한 전문직업인보다도 이러한 전문지식의 도움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표현형태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합목적성」(Zweckrationalitat)과 또한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윤리」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연구와 심리학·사회심리학뿐만 아니라 언론법에 대한 표면적 지식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의사들의 전문직업은 그 목적이 환자의 치유와 환자의 생명유지에 있다는 사실에는 의사자신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아무런 이의를 갖지 않으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방법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인의 경우는 그 경우가 다르다. 즉 언론에서 중요시하는 문제는 주어진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합목적성에 정보를 「수집」, 「선별」, 「제공」 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앞서 언급한 가능성이 전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합목적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윤리적 인식수준이 전제되는 문제로서 이점이 바로 직업심리적 직관과 기능적 숙련을 중시한 고전적인 언론인의 능력조건과 현대적인 언론인의 전문성 사이의 차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합목적적, 그리고 책임윤리적 언론인의 과제는 모든 언론수단이 모두에게 일반화된 규범에 준한 합리적 목적제시에 따라 동원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언론인은 커뮤니케이션의 하부구조적 이익에 도구화되어 정치적 과정의 흐름과 사회적 여론의 흐름을 결정짓고 있다. 언론계의 비판적 지성을 전체 국민의 이익에 충실한 전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 책임윤리적 그리고 합목적적인 행동규범을 고취시켜야 하겠다.

(2) 객관적 과제

다원적 산업사회일수록 언론인은 전문화된 정보원을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복잡한 경제정책적 결정들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인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수용자와 정보원을 연결해야 할 것이다.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적 과제 이외에도 이와 같이 특정분야에 대한 객관적 과제를 위해서는 이중적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학술저널리즘과 같이 고도로 특수화된 몇몇의 영역에서는 더욱 이중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적 과제와 특정분야에 대한 객관적 과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이중적 교육과정과 경험을 현실적으로 터득할 수 없고, 그러한 절대적인 필요성도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즉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거나 경제학자나 정치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중적 전문성은 여론조성이나 정보와 정보원이 판단과 정보에 대한 보도가치의 평가 등과 같은 언론인의 전문적 과제가 요구하는 특정한 분야의 객관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론인의 이중적 전문성은 저널리즘적 기능, 규범 그리고 윤리에 대한 전문적(fachlich) 능력과 선택적인 특정 분야별 객관적(sachlich) 능력으로서 이는 체계적 언론인교육을 통해서만이 구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한국의 언론인 재교육 실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언론인 재교육은 아마도 1953년 당시 공보처의 협조로 「서울신문학원」에서 개최한 「신문기자 아카데미 강좌」가 아닌가 한다. 이 첫번째의 재교육 강좌는 고 광복산 교수에 의해서 실현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공보처의 재정지원이 끊어져 몇 차례의 강좌만이 지속되었을 뿐이었다. 1980년말 언론통폐합과 함께 1981년 여름부터 제도화된 한국언론연구원의 재교육과정이 개설될 때까지 각종 언론기관들과 대학, 그리고 공보부가 주관하는 재교육의 기회가 있었으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지속성이 없었고 체계화가 되지 않은 단기적인 것들이었다.

(1) 대학주관의 재교육

역시 지속성이 없이 무산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산학협동 언론인 재교육 과정은 1971년에서 73년까지 한국기자협회와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기자협회가 위탁하여 서울대 신문대학원이 강의를 실시한 이 산학협동 언론인 재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던 기자의 전문화를 위한 특수강좌로서 대상은 신문·방송·통신의 중앙 및 지방사에 소속하는 경력 5년 이상의 중견기자들이었고, 1기에 2주간 60시간씩 연 4기의 강좌를 실시하였으나 끝내 제도화되지 못하고 3년간 지속되었다가 막을 내렸다. 2주간이라는 짧은 연수기간이었지만 강의내용은 매스컴에 대한 「전문적 강좌」가 공통과목으로 강의되었고, 매기마다 특정 주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문제를 설정하여 과목화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기적이고 본격적인 언론인 재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은 1963년 서울대학교에 신문연구소가 설치되면서부터 였다고 하겠다. 서울대 신문연구소는 당시 수업연한 1년제의 연구과정을 두어서 현역 일선기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큰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과정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하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1963년에 18명, 64년에 19명, 65년에 20명 그리고 66년에 13명을 배출하였을 뿐이었고, 1967년을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정의 역할은 1968년 서울대 신문대학원이 개원되면서 신문대학원에 위임되었다. 서울대 신문대학원은 매스컴 전공 연구자들을 위한 2년제 석사과정과 함께 현역 언론인들의 재교육을 위한 1년제 연구과정으로 이원화하여 개설되었었다. 60명 정원으로 개설된 2년제 정규 석사과정에서는 주야간 강좌가 실시되어 현역일선기자의 참여가 반을 차지하였다. 특히 정원제한이 없었던 1년제 연구과정에서는 주로 현역 언론인들을 수용하여 언론인 재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5년 서울대학교에 정규교육만을 담당하는 학부의 신문학과가 개설되면서부터 신문대학원이 폐지되었으나 그때까지 약 300여명의 언론인이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았고, 이들은 우리나라의 중견 언론인 중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대학원의 언론인 재교육을 위한 공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 신문대학원이 폐교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약 15개의 신문방송학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의 재교육을 위한 이렇다 할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1981년 3월부터 중앙대학교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문대학원이 개설되었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은 야간전문 대학원으로서 신문·방송·PR·광고·출판잡지 그리고 시청각분야의 5개 전공 코스가 있고, 5학기제 석사과정과 1년제 연구과정의 강의가 개설되고 있다. 현재 3차 학기까지 학생을 모집하여 총 183명의 재학생이 등록하고 있으며 이들 중 90% 이상이 해당전공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인들이다. 매학기마다 대학원에서 개설되고 있는 강의수는 기초공통과 전공분야별로 총 25개의 강의를 개설되고 연중 전후반 학기에 총 50여개 가까운 강의를 개설되고 있다. 동대학원은 국내유일의 기초공통과 전공분야별로 총 25개의 강의를 개설되고, 연중 연후반학기에 총 50여개에 가까운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동대학원은 국내유일의 매스컴전공의 전문대학원으로서 「로컬리즘」을 탈피하여 전체 매스컴학계의 교수들이 참여함으로써 특정기관의 보조나 참여가 없는 순수한 언론 실무인들이 체계적 연구와 재교육 과정이 되고 있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의 강의내용은 매학기마다 기초공통 2개과목과 각 전공별로 학기 별 2개 과목씩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이 학부에서 매스컴을 전공하지 않고 언론계에 종사하는 원생들이므로 이들에게 기초공통은 매스컴이론의 전반을 폭넓게 강의하고, 전공과목은 각 전공분야별로 전술한 매스컴의 기능 규범 그리고 윤리에 유관된 실무인의 전문적 과제를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유관적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원생 대부분이 대학에서 매스컴과 무관한 전공을 이수한 실무인들이기 때문에 전술한 특정분야에 대한 객관적 과제를 위한 교육은 매학기 말이나 방학기간 중에 현실문제를 중심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원생들과 관계 인사들이나 학계인사들간의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통한 경험적 교육을 구상 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81년 10월말에는 「한국의 언론제도와 공익성」이라는 주제하에 제 1회 신문방송대학원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었다.

(2) 언론기구 주관의 재교육

언론기관이 주관한 최초의 언론인 재교육은 1966년 IPI(국제신문인협회)의 재정적 지원을 얻어 실시하게 된 전국신문사의 간부와 일선기자 대상의 부정기적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는 72년에 와서는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그 후 한국신문연구소는 77년부터 1주간의 기자연수특강을 개설하여 몇 차례 지속되어 오다가 역시 중단되었다. 이러한 특강은 매스컴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무관한 것으로 그 당시마다의 사회문제를 주제로 삼아왔었다.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언론기관의 재교육은 기자협회에서 주관한 세미나였다. 1964년에 창립한 기자협회는 1965년부터 언론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첫 단계로는 65년부터 72년까지 지방기자들을 위해 개최한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는 26차례나 계속되어 온 지방기자들의 단기 재훈련 프로그램으로 훈련기간은 2-4일에 불과했고, 그 내용은 취재보도에 관한 신문학적 지식과 그때그때의 사회적 현실문제를 주제로 한 강의였다. 이 밖에도 기자협회는 68년에서 72년까지 각 부서별 그리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었고, 전술한 대로 71년에서 73년까지 산학협동 프로그램으로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중견언론인들의 단기 재교육을 서울대 신문대학원에 위탁해서 실시한바 있었다. 그 후, 기자협회는 아무런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가 1976년부터 「회원연수회」를 개최하여 회원기자들간의 정보교류와 자질향상을 꾀하여 왔으나 역시 수회에 걸쳐 실시되고 무산되고 말았다. 이밖에 언론기구에 의해서 주관되어 오는 재교육은 신문편집인협회의 세미나이다. 1965년부터 실시되어 온 편집인협회의 세미나는 81년 현재 17회가 실시되었고 세미나의 내용은 언론에 대한 주제로서 최근에는 주로 외부강사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기구들이 주최하는 재교육적 의미를 갖는 모임들은 모두가 지속성이 없고 단기적인 것으로 체계성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인 논의가 요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언론기구가 아닌 문공부에서 실시했던 「언론인 강좌」가 있었다. 문공부의 「언론인강좌」는 18일에서 25일간 77년 9월과 11월 그리고 78년 5월에 걸쳐 3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으나 무려 2000여명 이상이 동원되었던 관제 「언론인을 위한 강좌」로써 강좌의 내용은 국제문제를 주제로 하였고, 일반 교양과목을 추가시켰다. 문공부가 이러한 재교육 강좌를 실시하였던 동기는 여타의 모든 기업체나 국영 기관들에는 재교육의 기회가 있는 반면에 국가발전에 중대한 언론기관에는 재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려는데 있었다. 이러한 외형적 이유 이면에는 정부당국의 생각이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즉 우수한 자질을 가진 언론인들이지만 재교육의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현직에 종사하면 입사 당시의 건실한 의식을 망각하고 직업적 매너리즘에 빠져 부정적인 형태가 표면화된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언론연구원의 재교육 과정

언론연구원의 재교육 과정은 언론통폐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언론인 재교육의 제도화에 의한 시행이다. 우리나라 전체 언론기관의 보도국과 편집국에 소속하는 5천 6백 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본 재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 입사 6개월 이전의 수습기자를 위한 기초과정
- 5년 미만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초급과정
- 5년 이상 차장대우 이하의 기사를 포함하는 중급과정
- 차장과 부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상급과정 그리고
- 부국장에서 논설위원 및 입원까지 포함하는 특수과정이다.

한국언론연구원의 본관 제 2조에 따르면 본재교육과정의 설립취지는 우리나라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매체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1년 8월 20일 수습기자를 위한 기초과정에 92명이 등록하여 첫번째 수습기자 연수교육이 끝났고, 현재 제 2기의 수습기자 연수를 위한 8주간의 기초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일주일 단위로 개설되고 있는 초급과정은 현재까지 14기를 배출하였고 이 밖의 중급·상급 그리고 특수과정은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다.

언론연구원은 8주 코스의 수습기자를 위한 기초 코스에 110강좌에 달하는 커리큘럼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언론활동에 필요한 기초소양
- 직능실기분야에서 기사취재 9강좌, 신문편집 8강좌, 통신 및 외신 6강좌, 방송편성제작 8강좌, 진실보도 4강좌, 외국어 및 외지 6강좌, 언론특강 10강좌, 매스컴기초이론 9강좌, 언론법제 및 윤리 8강좌, 한국신문사 4강좌
- 일반교양으로 한국학특강 8강좌, 시사문제특강 12강좌 등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한국언론연구원의 언론인 재교육과정은 언론통폐합이전에 각종 언론기구들이 주관해 온 세미나와 연수회 등은 물론이러니와 한때 문공부에서 실시했던 「언론인을 위한 강좌」와 같은 각종 재교육 과정을 한군데에 모은 각종 재교육 형태를 통폐합하여 제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현행 언론인 재교육의 당면과제

(1) 한국언론연구원의 신뢰성 회복

81년 6월 22일 정식으로 언론연구원이 개원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언론인교육이 제도화되었다. 언론연구원은 사단법인으로 전국의 신문·방송 그리고 통신사들이 회원이 되며, 언론연구원의 정관에 의하면 회원의 회비와 공익자금 등에 의해서 운영재원이 충당된다. 즉 언론연구원은 발행인들과 방송국, 통신사의 장들이 소속 언론인의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 공동 출자하여 운영되는 언론계의 자율적 공용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운영되는 언론계의 자율적 기구라고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회원들의 회비는 현재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연구원의 재정부담은 전적으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재정보조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장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방송광고 수입은 공익사업에 지원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통제(방송광고공사법 제6조, 9조)를 받는 광고공사의 재원의존성은 한국언론연구원이 행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이미지를 남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교육자가 교육자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않을 때 실무진의 값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연수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연구원은 진정한 언론계의 자율적 기구로서 발행인들과 방송국의 장들은 물론 기자협회의 참여로 피교육자들의 요구와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서독의 경우, 언론인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치교육연방중앙회」(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는 국가기구이다. 그러나 「독일 신문평의회(Presserat : 발행인협회측 대표 10명과 기자협회측대표 10명으로 구성됨)의 요구에 따라서 정치교육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재교육의 교육내용도 발행인협회와 기자협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언론인 교육이 일원화된 예로서 영국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영국의 경우, 1952년부터 「전국기자양성철회」가 설립되면서 언론인의 재교육과 수습기자교육이 일원화 되었다. 그러나 교육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각 대학에 위탁으로 이루어지며 기구의 운영재원도 기자양성협회 기구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나 영국과

같이 일원화된 교육기관은 없고 언론인 자신들이 언제나 개인적으로 각 대학 신문방송학과나 연구소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각 대학의 해당 학과는 이들을 위해서 아침반 또는 특별연구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우수기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각 대학에 의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과정은 하버드대학의 「니만 · 펠로우 과정」, 콜롬비아대학의 「국제보도과정」, 워싱턴대학 저널리즘 센터의 「기자재 훈련과정」, 인디애나대학의 「국무성 초청 외국인을 위한 기자재교육과정」, 스탠포드대학의 「기자직 장학과정」,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도시문제과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독, 영국, 미국의 예와는 달리 일원화되어 있으나 발행인들과 기자협회측의 자율적 주관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뢰성 회복을 위해 좀더 폭넓은 평행적 합의과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2) 전문분야별 재교육의 필요성

영국의 경우 「전국 기자양성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현역기자들에 대한 8 주간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과학기자반, 경제기자반, 편집기자반, 체육기자반 등 전문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기자로서의 영예로운 자격증(Diploma)을 수여 받는다. 이러한 전문기자들의 재교육은 모두 위탁교육으로서 교육기간동안 직장에서 완전 해방되어 7 개 대학에서 소위 블록 · 릴리즈(Block Release) 코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 영국에는 1 주일에 1 일씩 2 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받는 소위 데이 · 릴리즈(Day Release)의 재교육코스는 22 개 대학들에 의뢰하여 운영된다. 미국의 경우, 기자 각자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거나 언론기관의 위탁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 대학의 재교육 코스로 콜롬비아대학의 국제보도과정이나 시카고대학의 도시문제과정 등을 언론인의 객관적 과제로 요구되는 특정분야에 대한 재교육이다. 서독의 경우 전문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기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이 베를린대학 「공시학 연구소」와 서독기자노조(Die Deutsche Journalisten - Union in der IG Druck und Papier)의 공동 주관으로 운영된다. 일주간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되는 재교육의 주제들을 예로 들면 「경제와 도시계획」 「지방저널리즘」 「경찰과 사법」 「언론과 제 3 세계」 「도시계획과 지역재정」 등이다. 기자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구의 하나인 「동일 저널리즘 교육원」(Das Deutsche Institut für Publizistische Bildungsarbeit)은 「사진기자」, 「스포츠기자」, 「과학기자」 등을 위한 분야별 세미나를 1 일 또는 1 일반의 단기로 일년에 20 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독의 재교육은 아직도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재교육의 체계화 · 전문화 그리고 시간적 연장은 물론 교육기간 전체를 법적인 교육휴가로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언론연구원의 5 개의 과정은 전문분야별로 특수화된 교육이 아니라 언론계의 종사년 한과

직위별로 구분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재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나 수습기자들을 위한 교과내용은 우리 민족이 역사와 전통의 본질규명이나 우리의 국제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 외교적인 위치와 정부의 당면과제나 지표에 대한 교과들을 중요하게 채택함으로써 전문인의 자질향상과 실무적 능력배양을 피하되 국가발전에 기여라는 목적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습기자들의 기초과정은 기초소양 17 강좌, 직능실기분야의 10 개 과목에 72 강좌, 그리고 일반교양분야의 2 개 과목에 20 강좌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기능실기분야와 기초소양을 통한 전문인적 자질향상과 국가관의 확립은 현실적인 절실한 요구이나, 이와 함께 이중적 전문성을 요구받는 언론인들에게는 부서별로 객관적(sachlick)과제에 부응된 연수과정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인의 재교육에 대한 학계와 언론계 사이에 산학협동적 차원에서의 협의기구가 운영되어야 하겠고, 신문사의 발행인들과 방송국의 장들의 재교육의 필요성에대한 인식을 높힘으로써 공동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또한 결과보다도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합의과정을 중시하는 정책입안자들의 사고방식과 피교육자들을 대변하는 기자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그들의 요구와 이익도 재교육의 정책에 반영되는 신뢰의 풍토조성이 또한 전제되어야 할 줄로 안다.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윈스터대학교 (철학박사 : 신문학 전공)

- 「자조집단을 통한 “CD” 경제사회학, 사회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학적 연구」, 「이원적 사회발전과 언론제도에 관한 연구」

- 현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